

統一情勢分析 2003-06

북한 병역제도 변화와 병역감축 가능성

2003. 9

정영태(통일정책실 선임연구위원)

박형중(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 일 연 구 원

<요 약>

1. 병역제도의 변화

- 북한이 지난 3월 개최된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 갔는데, 이는 의무병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조치로 평가됨.
 -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인민군 강연 자료¹⁾에서 “전민군사복무제방침에 따라 이제부터는 공화국공민(남자)이라면 누구나 군사복무를 해야할 법적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의무복무제 방침을 보다 분명히 하였음.

2. 병역제도 변화 배경

- 군기피 현상의 심화
 - 당원이 되어도 그다지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생스런 군대생활을 거쳐 당원이 되는 것 보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을 선호함.
 - 경제난으로 군대에서의 생활형편도 악화되어 군대기피 풍조가 확산되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아사망 및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가용 병력자원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초모 원천을 발굴 중이었음.

1) 북한 인민군 ‘강연자료’ 참조

3. 병역제도 변화 의미

가. 가용 병력자원 확대

- 식량난과 군기피 풍조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처방임.

나. 군기피 현상 심화에 따른 위화감 확산 방지

- 예외없는 군입대를 강제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선군 정치에 입각, 사회적 일탈현상을 차단할 목적임.

다. 병력 세대교체 단행으로 군대내의 일탈현상 억제

- ‘전민복무제’는 복무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장기 복무자를 감소시키는 한편, 새로운 병력 충원 원천을 확대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병력총수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함.

4. 병력감축설과의 상관관계

- 작년 북한군 병력 감축설이 확산되어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의 병력감축에 대한 최근 보도는 기존에 주장해오던 대외 홍보용 병력 감축설과 거의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100만명 대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임.
 - 군대 내부문제: 경제난으로 인해 군 배급 역량의 결핍으로 군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병력을 유지하면서 군에 대한 배급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군대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 사회 내부문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내놓았는데, 동 조치에 따른 군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대 병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병력 수 조정을 필요로 함.
-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적정수준의 병력 수 조정을 필요로 하지만 선군정치의 전반적 논리구조 및 현재의 핵위기 국면 하에서 당분간 기존의 병력수준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북한의 ‘전민군사복무제’에 따른 병역제도의 변화는 북한의 군사력 감축을 의미하는 병력감축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정책적 고려사항

○ 향후 북한의 병력감축이라든가 군축 등과 같은 전술적 제의를 하거나 유연비어성 병력감축설을 퍼뜨림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를 바라는 남한내의 ‘사이비’ 평화 분위기 창출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남한 내의 대북 군사태세 관련 여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 북한의 병력감축과 같은 군축설 유포에 대한 선부른 기대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군 당국 또는 대북 정보 당국자는 대북 군사태세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대북 군사정보 제공 기회 확대).

○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한 여러 부정적 파급 효과가 지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 조치와 같은 경제개혁 관련 조치를 취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북한의 병력감축 가능성에 부응하는 우리의 새로운 대비책이 요구됨.

- 먼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발전에 따른 경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 동시에 북한 군대에 미칠 수 있는 제 영향분석을 기반으로 북한의 다양한 병력감축 및 남북한 병력감축 제안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별 대비책 강구

○ 2002년도 50만 병력 감축설, 2003년도 ‘전민군사복무제’에 따른 복무연한 감축 등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의 병력감축설이

논란이 되어 왔음.

- 그러나 ‘전민군사복무제’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의 병력 감축 가능성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전민군사복무제’는 병력 총수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군병력의 세대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됨.
 - 복무기간을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각각 단축함으로써 장기 복무자를 세대시키는 한편,
 - 초모(招募) 기준의 완화, 모든 남자들의 무조건 군대 입대 원칙 등에 입각, 신규 병력 자원을 확대했음.
-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 군대 기피 풍조의 만연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감소와 위화감 확산 방지,
 - 장기 식량난에 따른 가용 병력 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응,
 - 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한 불만 증대 및 이탈 현상 증가의 예방 등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민군사복무제’는 부족한 가용 병력자원을 늘리고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이며, 작년 유포되었던 군감축설은 대미협상 유도를 위한 홍보 차원의 전술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전민군사복무제’ 시행 결정에 따른 북한 병역제도의 변화는 북한 군대의 강화를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북한군대의 강화에 대한 우리측의 확고한 군사적 대응태세가 요구됨.
 -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군사태세 이완 현상을 최소화

- 향후 북한의 병력감축이라든가 군축 등과 같은 전술적 제의를 하거나 유연비어성 병력감축설을 퍼뜨림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를 바라는 남한내의 ‘사이비’ 평화 분위기 창출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남한 내의 대북 군사태세 관련 여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 북한의 병력감축과 같은 군축설 유포에 대한 선부른 기대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군 당국 또는 대북 정보 당국자는 대북 군사태세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대북 군사정보 제공 기회 확대).

-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한 여러 부정적 파급 효과가 지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 조치와 같은 경제개혁 관련 조치를 취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북한의 병력감축 가능성에 부응하는 우리의 새로운 대비책이 요구됨.
 - 먼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발전에 따른 경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 동시에 북한 군대에 미칠 수 있는 제 영향분석을 기반으로 북한의 다양한 병력감축 및 남북한 병력감축 제안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별 대비책 강구

- 목 차 -

I. 서론	1
II. 북한의 병역제도 변화 및 의미	1
1. 병역제도의 현황과 변화	1
2. 병역제도 변화 배경	5
III. 병역제도 변화 의미	6
1. 가용 병력자원 확대	6
2. 군기피 현상 심화에 따른 위화감 확산 방지	7
3. 병력 세대교체 단행으로 군대내의 이탈현상 억제	7
IV. 북한의 병력감축설과의 상관관계	7
1. 북한의 병력감축설에 대한 평가	7
2. 병역제도 변화와 병력감축설의 상관관계	10
V. 정책적 고려사항	11

I. 서론

- 지난 3월 북한은 제 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전군복무법’을 제정, ‘전민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 졌음.
 - 동시에 복무기간도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각각 단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우리 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북한의 병력감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대두하게 되면서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 변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50만 병력 감축설과 전방지역 병력 감축설 등이 유포됨으로써 북한의 병력 감축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군 병역제도의 변화 및 의미를 분석·평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게 될 것임.

II. 북한의 병역제도 변화 및 의미

1. 병역제도의 현황과 변화

가. 북한의 병역제도 현황

- 북한의 병역제도는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招募制)임.
 - 북한어휘사전인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초모(招募)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뽑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식상으로 볼 때 우리의 지원제에 해당함.

- 실제로는 초모란 군 복무를 위해 군대에 강제징집 당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징집(徵集)과도 유사함.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956년 이전에 형식상 지원제, 실제 강제 징집, 1956년 이후 인민무력부 “인민군 복무조례” 명령에 의거 실제 의무병제를 채택했음.

- 북한헌법에 “조국보위는 국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명예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제 86조)고 규정함으로써 의무병제를 법제화 하였음.

○따라서 북한에서는 일정한 초모연령이 되면 초모 제외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복무를 하게 됨.

- 초모제외자:

- ① 신장 150cm 이하, 체중 48kg 이하, 폐결핵, 늑막염, 색맹 등 각종 질환자(신체 불합격자)
- ② 사회 중요직 근무자(교직자, 당직자, 의전 요원 등) 및 산업 필수요원
- ③ 성분 불량자(월북자, 귀환자, 북송교포, 전과자 및 신원조회 부적격자)

○초모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첫째, 인민무력부 군사대열 보충국에서 인민군 전체의 손실 병력을 판단하고 손실병력 충당을 위해 도 단위 병종별 소요인을 할당하며, 도 군사동원부에 초모를 지시함.
- 둘째, 도 군사동원부에서는 군(郡) 단위 병종별 소요인원을

배분 할당하고 군(郡)군사동원부에 초모를 지시하며, 초모 대상자를 선별하여 보고함.

- 셋째, 군(郡) 군사동원부에서는 초모 대상별 개별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신원 조회과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며, 신체검사 대상통보→ 실시→ 결과보고로 이어지며, 초모 대상자를 선별 보고함.
- 넷째, 군(郡) 군사 동원부 주관으로 군내 병원 또는 학교에서 약 7일간 신검이 이루어지고, 군 사회안전부 신원 조사과 주관으로 초모 대상자의 사상동향을 파악함.

○ 일단 초모 절차가 끝나면 입대절차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됨.

- 도 및 군사 동원부에서 신체검사 합격자, 신원조회 적격자 대상으로 초모 대상자를 확정→ 도 및 군 군사 동원부에서 지상군, 해군, 공군으로 분류→ 도 및 군 군사 동원부에서 대열편성 소속부대 군관에 의해 각 단위부대 단체 수송→ 입대자 환송식을 거쳐→ 각 단위 부대에 입소하게 됨.

○ 군복무기간은 병종 별로 차이가 있음.

- 특수부대 요원(저격, 경비, 민경, 군단급 이상 경찰 부대) 및 교육기관 근무자: 만 10년
- 기술병종 및 전투 차량 운전수: 만 11~12년
- 기간을 초과해 군복무(장기복무)를 하는 초기복무 요원: 25년
- 여군의 경우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만 23세까지
- 비서국 대상 자녀들의 경우 김정일의 특별 지시로 만 8년간 복무(1992년 이전)

- 그런데 실제로는 북한의 군복무기간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북한에서는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 데, 김정일이 언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정책관철이 달라져 군복무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함.²⁾

나. 북한의 병역제도 변화: ‘전민군사복무제’

- 북한이 지난 3월 개최된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 갔는데, 이는 의무병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조치로 평가됨.
-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인민군 강연 자료³⁾에서 “전민군사복무제방침에 따라 이제부터는 공화국공민(남자)이라면 누구나 군사복무를 해야할 법적의무를 지니게 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의무복무제 방침을 보다 분명히 하였음.
- ‘전민군사복무제’방침 관련 당중앙군사위원회명령에 따라 국가적으로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모든 남자들은 초모 나이가 되면 무조건 군대에 나가야 한다.
 -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이나 양성기관, 로동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에도 재학기간이나 근무기간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군사복무를 하도록 한다.
 - 감정제대, 처벌제대 등 만기제대자들은 병을 고치거나 결함을 고친 다음 반드시 이미 복무하던 부대(중대)에 다시

2) 탈북자(윤XX: 전북한군 하사) 증언
 3) 북한 인민군 ‘강연자료’ 참조

가서 만기를 채워야 한다.

- 미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만들어 군사복무를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강한 대책을 세운다.

2. 병역제도 변화 배경

○군기피 현상이 심화됨.

- 당원이 되어도 그다지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생스런 군대생활을 거쳐 당원이 되는 것 보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을 선호함.
- 경제난으로 군대에서의 생활형편도 악화되어 군대기피 풍조가 확산되었음.
 - ※ 군대 내에 점차적으로 장교에게 주던 배급까지 줄어들어 대대장까지 먹을 것이 없자 대대장이 되는 것조차 회피하고자하는 풍조가 있으며,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쪽으로 선호가 변화되어 자재, 무역, 외화벌이 단체에 소속되는 것을 더 원함.⁴⁾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아사망 및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가용 병력자원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초모 원천을 발굴 중이었음.

- 매년 2회(3월, 9월)의 정기 초모와 정세 긴장시, 비밀지시 하달시(부대 신편 및 증편), 대량제대 및 병력 손실시의 부 정기 초모 등이 있다.

4) 탈북자(윤XX: 전 북한군 하사) 증언

- 초모 연령은 1965년~1972년에는 만 20세 이상이었으나 1972년 이후부터는 만 17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음.
 - 당시 초모 연령의 하향조정 이유는 전투사상을 조기에 주입한다든가, 전투원 장기 확보 및 공민권 부여시기와의 균형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지고 있음.
- 초모 기준은 1995년 이전까지는 남자 150cm 이상(여자 155cm 이상)이었지만, 그 이후 145cm(여자 150cm)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병력 구성 면에서 남성에 대하여 여성의 비중이 증가했음.

Ⅲ. 병역제도 변화 의미

1. 가용 병력자원 확대

- 식량난과 군기피 풍조 등으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처방임.
 - 식량난으로 인한 탈영현상 증대: “(신입병사훈련을 받던 중 어느 한 탈영군인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저녁마다 주변 장사군의 집에서 외상으로 음식물을 가져다 먹군했다.”는 사례는 식량난으로 인한 탈영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1970년대까지는 무단외출이 많았는데 1980년대부터 탈영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달이상 무단 이탈하는 경향 증가⁵⁾

5) 탈북자(고xx: 전 북한군 중좌) 증언

2. 군기피 현상 심화에 따른 위화감 확산 방지

- 예외없는 군입대를 강제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선군 정치에 입각, 사회적 일탈현상을 차단할 목적임.

3. 병력 세대교체 단행으로 군대내의 일탈현상 억제

- 장기 복무자가 증대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군대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군기문란과 일탈행위 확대의 원인이 되었음.
 - 장기 복무로 인한 피로감 누적, 탈영, 일시적 군대 이탈 증가
 - 민폐 증가로 군·민관계 악화
- ‘전민복무제’는 복무기간을 13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장기 복무자를 감소시키는 한편, 새로운 병력 충원 원천을 확대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병력충수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함.

IV. 북한의 병력감축설과의 상관관계

1. 북한의 병력감축설에 대한 평가

- 작년 북한군 병력 감축설이 확산되어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2002년 7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회의에서 북한이 연례안보보고서를 통해 북·미평화협정, 주한

미군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등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군축방안을 대외에 천명함.

- 2002년 9월 이탈리아 코모에서 개최된 ‘한반도에너지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은 50만 감축설을 유포함.

○북한의 병력감축에 대한 이러한 보도는 기존에 주장해오던 대외 홍보용 병력 감축설과 거의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됨.

- 50만 감축설의 경우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노동력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모면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북·미평화협정체결 및 기타 전제조건을 단 군축방안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홍보해 왔던 사안에 불과한 것임.

- 북한은 1987년 7월 남북한 군대의 10만명으로의 감축,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포함한 ‘단계적 무력감축 제안’을 발표하였으며,
- 1988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의 연석회의에서 각 3단계 주한미군철수와 1991년 말까지 남북한 병력의 10만명으로의 병력감축, 남북한과 미국간 3자회담, 남북한간 고위 정치·군사회담 개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신뢰구축방안 등에 관한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안
- 북한의 연형묵 전 총리는 19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 때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으로 군축안을 제시한 바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이 외국군대와외의 합동훈련을 제한하고 비무장 지대(DMZ)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신뢰가 구축되면 쌍방의 병력을 30만명→2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각각 10만명 선을 유지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100만명 대 병력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임.

- 군대 내부문제: 경제난으로 인해 군 보급 역량의 결핍으로 군의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병력을 유지하면서 군에 대한 보급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군대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사회 내부문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내놓았는데, 동 조치에 따른 군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대 병력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병력 수 조정을 필요로 함.
 -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용품 가격의 약 20~40배 인상, 식품가격의 40~50배 인상, 임금의 15~20배 인상, 각종 국가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세금확대 등으로 요약됨.
 - 특히 북한은 이에 상응한 ‘군인 생활비(임금)’ 인상을 단행하였음.

6) 6.25 당시 북한의 병력수는 198,380명으로 북한병력이 남한 병력의 2배 수준이었으며, 전후 1955년 말 북한군은 41 만명 이상으로 증강되었음. 1956년 북한인민군은 민간 노동력 고갈로 인해 8 만명의 병력감축 이후, 1960년대 전 기간을 통하여 30만명의 병력을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에는 40만→50만→60만명대 수준의 병력으로 다시 증강되었음. 이어 북한은 1980년대 와서는 70~80만명대로, 1990년대에 와서는 90~100만명대로 병력을 증강하였음.

“지난 시기 사회일군들과 생활비균형을 맞추어 실시하던 조건에서 장령, 군관, 군관 대우자, 초기복무사관들은 사회성원들과 같이 식량을 사먹는 것으로 타산하여 군인 생활비를 평균 18배 수준에서 올리었다.”(북한 인민군 대상 강연 문건)

-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적정수준의 병력 수 조정을 필요로 하지만 선군정치의 전반적 논리구조 및 현재의 핵위기 국면 하에서 당분간 기존의 병력수준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병역제도 변화와 병력감축설의 상관관계

- 최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으로 북한군인들의 일탈행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2001~2002년 사이 식량난으로 인한 탈영병이 약 1만 5천명 발생된 것으로 추정
 - 식량 및 각종 생필품 보급 지연에 의한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긍심 상실
 - 군인들의 장마당 음식 등 강제 갈취
 -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음식물에 대한 절도 행각 빈발
 - 중국으로 고장난 무기 조립 밀수출⁷⁾, 음란비디오 비밀 감

7) 7월 10일경 북한군 국경경비대 함경북도 무산대대는 군인들이 소총탄 30발을 훔쳐 중국상인들에게 팔았다는 정보를 입수, 이를 점검하는 대대적인 실사를 벌인 바 있으며, 범인을 찾지 못하고 의심이되는 군인 30여명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범인색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intelligence NK Scope, 「북한의 7월」, 북한시사 연구소, p.8.

상 및 판매

- 부대물자(담배, 식료품, 비누 등)를 주민과 밀거래
- 국경지역 군인들의 금품 수수로 밀수 및 탈북자 목인

○북한 당국은 북한군대의 이러한 일탈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사복무에 관한 간부들의 사상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민군대의 재정비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오고 있음.

- 즉, 북한은 ‘전민군사복무제’와 인민군 복무연한 단축을 동시에 시행하는 군대 재정비 조치를 통하여 통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전민군사복무제’에 따른 병역제도의 변화는 북한의 군사력 감축을 의미하는 병력감축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V. 정책적 고려사항

○‘전민군사복무제’ 실시를 통한 북한 병역제도의 변화는 부족한 가용 병력자원을 늘리고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군대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의 해이해진 군부대의 재정비를 꾀함으로써 강군육성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 이를 위해서 김정일은 군초모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확대(2002.10)한 바 있으며 국방위원회는 “무조건적 군사복무 명령”을 하달(2002.8)함으로써 군의 약화를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음.

- 작년 유폐되었던 군감축설은 대미협상 유도를 위한 ‘미끼용’ 허위사실 유폐나 홍보차원의 전술적 행위일 가능성이 큼.
- 북한의 ‘전민군사복무제’ 시행 결정은 북한 군대의 강화를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북한군대의 강화에 대한 우리측의 확고한 군사적 대응태세가 요구됨.
 -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따른 군사태세 이완 현상을 최소화
- 향후 북한의 병력감축이라든가 군축 등과 같은 전술적 제의를 하거나 유언비어성 병력감축설을 퍼뜨림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를 바라는 남한내의 ‘사이비’ 평화 분위기 창출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남한 내의 대북 군사태세 관련 여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 북한의 병력감축과 같은 군축설 유폐에 대한 선부른 기대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군 당국 또는 대북 정보 당국자는 대북 군사태세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대북 군사정보 제공 기회 확대).
-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한 여러 부정적 파급 효과가 지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동 조치와 같은 경제개혁 관련 조치를 취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북한의 병력감축 가능성에 부응하는 우리의 새로운 대책이 요구됨.

- 먼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발전에 따른 경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 동시에 북한 군대에 미칠 수 있는 제 영향분석을 기반으로 북한의 다양한 병력감축 및 남북한 병력감축 제안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별 대비책 강구